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6년 제1호(통권 제51호)

발행일 2026년 5월 27일 | 발행인 성재민 원장직무대행 | 편집인 강동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를 중심으로\*

이경희\*\*

###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창업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창업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로 구성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최근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스케일업,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여 단순 양적 확대에서 질적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정책 투입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sup>1)</sup>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단순한 창업기업 수 증가를 넘어 혁신 역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 창출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창업지원 메커니즘이 이러한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는 고용 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 창출 패턴·경로를 분석하고,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의 단계별 고용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4가지 행정 및 기업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PSM)과 단계적 이중차분법(Staggered DID)을 결합한 준실험적 방법론을 통해 각 지원 패키지의 단계별/연계 지원이 수혜 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 726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고용의 질적 성과와 정책 집행의 현장 실태를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 이 글은 이경희 외(2025),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을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창업기업의 성장과 고용 효과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희 외(2025) 제2장 제3절 참조.

도출하고, 고용의 양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창업지원 정책 현황

### 1. 국내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특성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는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2024년 기준 창업기업 수는 100만 개를 상회하며, 정부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창업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구조적 과제가 상존한다.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고용 규모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딥테크, 바이오, 제조업 등 장기 R&D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창업 초기 자금 부족과 핵심 인력 확보 난관이 성장의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 추이를 보면, 업력 증가에 따른 고용 규모의 확대가 확인되나 고용의 질적 수준 — 특히 안정적 일자리 비중과 R&D 인력 비중 — 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창업지원 정책이 단순한 창업 수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구조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 2.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패키지 개요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예비·초기·도약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세 가지 핵심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 가지 패키지는 창업 전 단계(예비)부터 스케일업 직전 단계(도약)까지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자동 보장은 아니지만 패키지 간 단계적 연계 지원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후 초기창업패키지로, 초기창업패키지 수혜 후 창업도약패키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사다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패키지 개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대상	혁신 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無)	유망 아이템/기술 보유 창업 3년 이내 기업	업력 3~7년 도약기 창업기업
핵심 목표	BM 개발·시장 안착	사업화 고도화·성장 기반	스케일업(scale-up)·일자리 창출
주요 지원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평균 7천만 원	사업화 자금 평균 1억 3천만 원
프로그램	BM 고도화·MVP 제작·멘토링	투자 유치·판로 개척 맞춤형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후속투자 대기업 협업

주 : BM(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기능제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각 패키지별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속적 지원의 고용 효과가 단독 수혜에 비해 얼마나 큰 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III. 창업지원 정책의 양적 고용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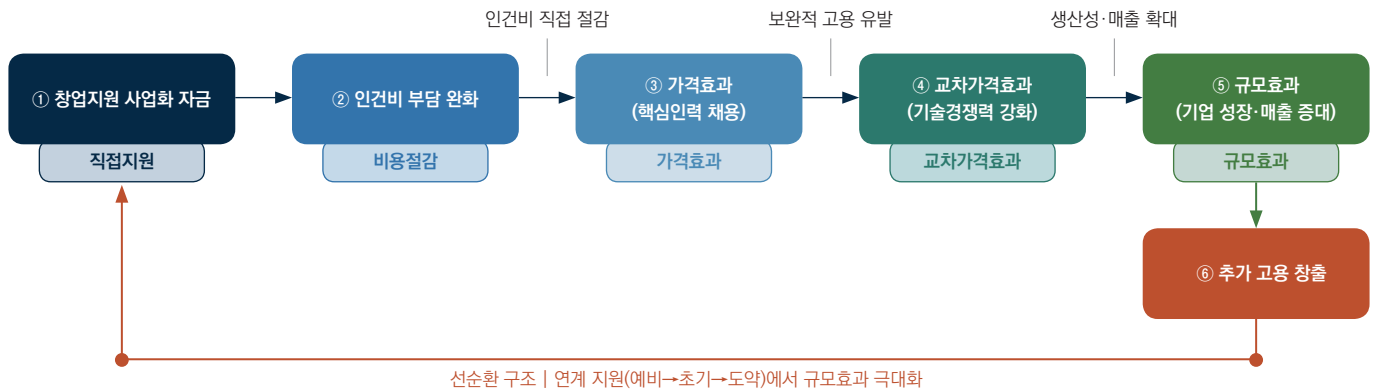
### 1. 분석 자료 및 방법론<sup>2)</sup>

본 연구의 양적 효과 분석은 네 가지 행정 및 기업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행한다.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수혜기업 리스트(2019~2022년), SIMS DB(수혜기업의 기본정보 및 매출액), KoDATA DB(미수혜기업의 기본정보 및 매출액), 고용보험 DB(종사자 수 정보)를 결합하여 기업-연도 패널을 구축한 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추정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단계적 이중차분법(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Staggered DID)을 결합하여 각 패키지별 정책 수혜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하였다. PSM을 통해 수혜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수혜기업을 대조군으로 구성하고,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고용 및 매출에 대한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reated, ATT)를 추정하였다. 특히 Callaway and Sant’Anna(2021)의 단계적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호트별 처치 시점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통적 TWFE(Two-Way Fixed Effects) DID 추정량의 편

2) 본 연구의 분석 자료 구성 및 추정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경희 외(2025) 제3장 제1절, 제2절 참조.

[그림 1] 창업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경로 : 가격효과·교차가격효과·규모효과와 선순환 구조



주: 화살표는 인과적 영향 경로를 나타냄. 주황색 화살표는 추가 고용 창출이 다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경로를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단계적 연계 지원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는, 특정 단계 수혜기업 사이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PSM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해당 단계 수혜기업 중 다음 단계 수혜기업과 미수혜기업의 성과 차이를 Staggered DID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 2. 창업지원 패키지의 고용영향 경로

창업지원 패키지의 사업화 자금은 창업기업의 주요 고정비용, 특히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킨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가격효과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낮아지면, 기업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에 고용하지 못했던 고급 인력을 채용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고용량 증가로 직결된다.

둘째는 교차가격효과이다. 지원금은 주로 개발/연구 인력 채용에 활용되는데, 이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핵심 기술 인력 확보는 제품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마케팅, 영업, 관리 등 다른 부문의 인력 수요를 함께 증가시키는 보완재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규모효과이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기술 개발 성과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규모의 성장(매출 증대)을 촉진한다.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어지

는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성장단계별 연계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핵심 인력이 후속 단계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시너지를 일으켜 이러한 규모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각 창업지원 패키지의 고용 및 매출 효과

### 가.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 단계의 예비창업자에게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PSM-Staggered DID 추정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수혜기업은 미수혜 유사 기업 대비 평균 0.94억 원의 매출 증대와 0.34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다른 단계에 비해 작지만, 이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지원이 사업 생존의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창업 초기에 핵심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 생존 자체와 직결되는 성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평균 7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제공한다. 추정 결과, 미수혜기업 대비 평균 3.45억 원의 매출 증대와 1.89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초기 시장 진입 및 사업화 고도화 단계에서 정책 자금이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했음을 보여준다. 예비창업패키지에 비해 고용 효과가 약 5.6배 크

게 나타난 것은, 제품과 시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이 단계에서의 정책지원이 보다 생산적, 고용친화적인 방식으로 활용됨을 시사한다.

다.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는 업력 3~7년의 도약기 기업에 평균 1억 3천만 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추정 결과, 미수혜기업 대비 평균 5.18억 원의 매출 증대와 2.71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확인되어, 세 단계 중 가장 큰 절대적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 단계 수혜기업의 지원 당시 평균 종사자 수가 11.4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2.71명의 추가 고용은 기업 인력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로 스케일업 가속화에 정책 투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시장 확장 직전 단계에 정책 자금이 투입될 때, 초기 단계에서 축적된 R&D 인력 등 기업 역량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 각 패키지의 효과 분석 결과

단계	미수혜 대비 매출 효과(억 원)	미수혜 대비 고용 효과(명)
예비창업패키지	0.94***	0.34***
초기창업패키지	3.45***	1.89***
창업도약패키지	5.18***	2.71***

주 : 1) PSM + Staggered DID 추정 결과.  
2) \* 90%, \*\* 95%, \*\*\* 99%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4. 단계적 연계 지원의 추가 고용 및 매출 효과

창업지원 패키지 간 단계별 연계 활용의 추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후 단계를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 및 매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비창업패키지 활용 후 초기창업패키지를 추가 활용한 기업은 예비창업패키지만 활용한 기업 대비 1.2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였다. 초기창업패키지 활용 후 창업도약패키지까지 연계 활용한 기업은 초기창업패키지만 활용한 기업 대비 4.6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여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 인력과 고용 안정성이 도약기 자금 지원을 통해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연속

성이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넘어 장기적 스케일업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표 3〉 단계적 연계 지원의 추가 효과 분석 결과

분석 모형	추가 매출 효과(억 원)	추가 고용 효과(명)
예비창업 대비 예비+초기창업	1.49***	1.21***
초기창업 대비 초기+창업도약	5.33**	4.61***

주 : 1) 단독 수혜기업 대비 연계 수혜기업의 추가 효과(Staggered DID 추정 결과).  
2) \* 90%, \*\* 95%, \*\*\* 99%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IV. 창업지원 정책의 질적 고용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효과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패키지를 수혜 또는 미수혜한 창업기업 726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혜기업(7개) 그룹과 미수혜기업(4개)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수행하여 정책 집행의 현장 실태와 고용의 질적 성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 단계별 정책의 기여에 대한 평가

가. 초기 단계 : 창업 안전망과 고용의 물적 토대

창업 초기 단계(예비/초기) 기업들은 정책지원이 생존과 사업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예비창업패키지 수혜기업은 ‘고정비 충당’을, 초기창업패키지 수혜기업은 ‘시제품 개발 자금 확보’를 주요 기여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정책이 예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창업 안전망’ 역할을,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품화 가속화’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기 자금 지원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핵심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창업 실패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도약 단계 : 기술 경쟁력과 자금 안정성

창업 도약 단계 기업들은 정책지원이 시장 경쟁력 확보

와 재정적 안정성에 집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창업 성장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 개선'과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꼽은 것은, 창업도약패키지 자금이 민간 투자 유치 전까지 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를 높이는 브릿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도약 단계 기업의 정책 만족도는 초기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규모 자금 수요, 글로벌 시장 진출, 후속 투자 연계 등 고도화된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 보인다.

## 2. 고용 창출의 질적 성과

### 가. 개발·연구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

정책지원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패키지 단계에서 개발·연구 인력 중심의 고용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력 중 개발·연구 인력의 비중은 예비창업패키지 65.5%, 초기창업패키지 78.3%, 창업도약패키지 80.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의 목표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 역량 확보에 자금이 성공적으로 투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발·연구 인력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은, 도약 단계에서 기업이 핵심 기술 고도화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창업지원 정책이 단순 고용 증가뿐 아니라 혁신 역량 강화형 고용 구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고용 유지율 : 단기 채용을 넘어선 안정적 고용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 종료 후에도 예비창업패키지 80.0%, 초기창업패키지 79.5%, 창업도약패키지 78.0%가 고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단계 모두에서 약 80%에 달하는 높은 고용 유지율은, 정책지원으로 채용된 인력들이 단순한 단기 보조금 활용 목적의 고용이 아닌, 기업의 핵심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창업도약패키지에서의 고용 유지율(78.0%)이 초기 단계에 비해 소폭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약 단계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만큼, 인재 이탈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

유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 3. 정책 집행의 현장 실태와 한계

### 가. 행정적 부담 : 혁신 속도를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하면, 창업기업들이 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지적한 문제는 행정적 비효율성이다. 창업지원 사업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요구 및 평가 기준'이 지목되었으며, '지원금 사용 항목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및 승인 절차'도 주요 비효율성 원인으로 꼽혔다. 창업기업들이 핵심 사업화 대신 복잡한 서류 작성, 정산, 승인 대기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혁신 속도를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 나. 자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 : 현실과 요구의 격차

고용 창출 성과 향상을 위해 창업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개선 방안은 '인건비 지원 금액의 확대 및 단계별 차등 적용'(51.5%)이었다. 특히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 실제 평균 지원액이 1.25억 원임에도 기업들이 인식하는 적정 규모는 평균 3.25억 원으로, 실제 지원액과 요구 규모 간에 약 2.6배의 큰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딥테크, 바이오 등 고급 R&D 인력의 높은 인건비와 정책지원 규모 간의 불일치가 우수 인력 채용 및 장기 고용 유지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

설문조사에서 정책 미선정 기업의 74.0%가 탈락 후 탈락 사유에 대한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부재는 재도전 의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창업 생태계의 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과도한 정량 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와 '기존 산업구조에 맞춘 평가 기준' 또한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특히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으로 작용하여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 V. 정책 제언: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

### 1. 혁신 지향적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편

정책지원이 단기적인 고용 성과 충족을 넘어, 혁신 인력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는 인건비 지원 규모의 확대 및 차등화이다.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업종별(특히 딥테크 분야)·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 기업들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3.25 억 원)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의 권고 하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지원 종료 후 1~2년간 채용 인력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후속 지원 프로그램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정책지원의 급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단기적 채용 성과 중심에서 장기적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R&D 인력 특화 채용 시스템 강화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65~80%가 개발·연구 인력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인력 매칭 지원을 IT·바이오·제조 등 딥테크 분야의 전문인력(석·박사, 고급 개발자) 채용에 특화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상한을 일반인력의 경우보다 높여 우수 인력 확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고급 R&D 인력을 탐색·채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력 매칭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학·출연 연구원과 연계된 인재 풀 확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필요 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높고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별도의 딥테크 전문인력 지원 트랙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 3. 정책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 혁신

창업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높여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선(先) 집행 후(後) 감사 시스템을 확대하고, 기관 및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계획서·정산 보고 서식을 표준화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책 비선정 기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제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탈락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도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및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전 의향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창업 생태계의 '실패 → 학습 → 제도전'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4.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전략 도입

단기 생존 지원과 장기 대규모 혁신 지원을 명확히 분리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 투입을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일반 창업 트랙(초기 자금·보육 중심)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헤비 트랙'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헤비 트랙은 딥테크 기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단기 정량 성과 지표를 면제하고 기술성숙도(TRL) 및 시장 잠재력 중심의 정성적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장기 R&D 투자가 필수인 기업의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 5. 단계별 연계 지원의 체계화와 후속 투자 매칭 강화

초기창업패키지 후 창업도약패키지를 연계 활용한 기업이 추가적으로 4.61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실증 결과는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순차적으로 활용한 우수 기업에 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자동 브릿지 트랙'을 도입하여 정책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후속 투자 매칭의 질적 제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형식적인 데모데이를 지양하고, 실제 투자 집행 이력이 있는 벤처캐피탈(VC) 및 전문 엔젤과의 1:1 심층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 글

로벌 시장 진출 지원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서 해외 현지 규제·법률·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질적 바이어 매칭에 집중하는 고도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혜기업들이 해외 바이어·투자자·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23.3%)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평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VI.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패키지는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비창업에서 초기창업, 창업도약으로 이어지는 지원 단계가 높아질수록 고용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커지며, 단계 간 연계 지원은 단독 수혜 대

비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력의 65~80%가 개발·연구 인력으로 구성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약 80%의 고용 유지율을 보인다는 점은 정책지원이 단기적 일자리 수 증가를 넘어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형 양질의 고용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용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이 존재한다. 인건비 지원 규모와 현장 수요 간의 큰 격차,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이 혁신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딥테크 등 장기 R&D 기반 기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기 정량 성과에서 장기 고용 안정성과 혁신 역량 강화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창업지원 정책은 한국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경희·박문수·한창용(2025),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각 연도.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 2. 17.), 「2025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가 시작됩니다!」.
- Callaway, B. and P. H. Sant'Anna(2021),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ime Period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pp.200~230.

**KLI** EMPLOYMENT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B R I E F